

Strategy report

제 2호 [2025. 8. 25.]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



한반도문제연구소

Korean Peninsula Issues Research Institute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

1. 서론

오늘날 중국은 자국의 영역 확장 및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하며, 자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중국이 구상한 ‘도련선(島鍊線) 전략’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류화칭(劉華清)이 도련선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당시, 중국은 제1도련선을 확보한 뒤 2020년까지 제2도련선을 장악하고, 2040년에는 제3도련선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장기 해양 전략을 세웠다. 이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굴기(海洋崛起)’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 핵심 전략자산을 제1도련선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치해왔다. 실제로 2023년 6월,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확보한 영향권 내에서 과거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질서를 재건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러나 도련선 내부의 국가와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이 눈에 띈다.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처럼 국제 물류의 중심지이거나, 중동산 원유가 통과하는 해상 교통로를 포함하는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이 태평양으로의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실히 통제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는 곧 자국의 주변국들을 우방으로 만들거나, 적어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단순한 군사력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군사적 우위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변국을 설득하거나 포섭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 유인, 문화적 영향력, 정보전, 외교적 압박, 심리전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복합 전략, 즉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는 상대국에게 무력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압박과 강요를 병행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무력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서구 중심의 질서로부터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현지화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대외전략의 근본 원리인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그 기저에 놓인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사고방식, 즉, 중국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재편하려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하이브리드전이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은 전통적인 군사력에 의존하던 기존의 전쟁 형태와 달리,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해 상대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복합적 형태의 전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 전쟁은 탱크나 미사일을 사용하는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을 통한 정보전,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심리전 등 다양한 비물리적 수단이 동시에 활용되는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은 명확히 ‘전쟁’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며, 평화와 전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을 통해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 상대국의 정치·사회 체계를 교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하이브리드전을 통해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상대국의 정치적 결속력과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형태의 ‘비정규전(unconventional warfare)’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는 군사력 사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전력 망 마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무역 제재와 에너지 공급 차단을 통한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유도, 사회 내부의 갈등 조장 등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서 군수공장 폭발, 철도 탈선, 요인 암살 시도, GPS 교란 등 사보타주(sabotage) 공작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요원을 투입하기보다는 현지인들을 포섭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4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을 FSB 포섭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대응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최근 1년간 FSB에 포섭되어 테러 등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 600명 중 미성년자가 약 2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FSB)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SNS에 ‘easy money’ 등의 검색을 하는 행동을 파악, 이들에게 접근해 물건 운반, 목표물 촬영 등 단순 임무를 제안하면서 수백~수천 달러의 고액 보수를 제시하였고, 이후 협조 사실을 약점으로 삼거나 휴대폰 해킹으로 취약점을 이용해 더 위험한 임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포섭을 고도화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15세·17세 청소년이 사제 폭탄을 제작, 원격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 입은 사건, ‘온라인 퀘스트 게임’으로 위장해 군부대 촬영 및 방화 등을 유도한 사례, 포섭된 10대들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유인해 폭파한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SBU는 이러한 접근자가 거액 보수를 제시하며 단순 심부름을 부탁할 경우 즉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FSB 요원 폭로’ 챗봇 등 신고·대응 수단을 안내하며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군사력보다 ‘인지전(cognitive warfare)’ 과 스파이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0년의 수모와 중국몽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네러티브를 무기로 한 인지전과 더불어, 중국산 통신 장비와 전자제품에 내장된 백도어를 통해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신장비를 통한 정보 수집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하이브리드전은 무기 대신 정보, 인식, 기술이 주요 전장이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내부 여론 분열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하이브리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꼽힌다. 당시 러시아는 특정 국가의 병력이라고 지칭하기 애매한 무장 병력, 일명 ‘리틀 그린 맨’을 투입하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SNS 여론 조작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말의 무력충돌 없이 크림반도를 점령할 수 있었다. 중국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형태로 경제전·정보전·해양 회색지대 전략(gray-zone strategy)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 조작, 사이버 침투, 경제 의존 심화, 문화 공정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무력 충돌 없이 여론전, 경제적 압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은 “적이 언제, 어디서 공격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만드는 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의 정치·경제·기술·문화 전반을 은밀하게 침투·교란하기 때문에 전통적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전술적·개념적 전환은 기존의 전략 패러다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초한전’은 군사력과 비군사적 수단(정보·경제·법률·미디어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이브리드·인지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전·운용해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중국이 이와 같은 접근을 발전시켜 온 배경에는 손자병법 등에서 비롯된 ‘속임수와 기만, 비정규적 수단의 활용’ 같은 전통적 전략사상과, 근현대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전력의 비대칭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현실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역사적 맥락이 내제되어 있다.

3. 중국과 손자병법

兵者，國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전쟁은 국가의 큰일이며, 죽고 사는 문제요, 존망의 갈림길이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이 구절은 손자병법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중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열과 통일의 연속이었다. 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손자는 전쟁을 국가의 최대 리스크로 보았고, 전쟁이 제국의 멸망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가 전쟁에 대해 이토록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농경 사회의 전략가였기 때문이다. 농경 문화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국가 운영의 핵심이다. 농업 생산력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자연재해만 피할 수 있다면 식량을

축적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전쟁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병력을 징집하느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줄어들고, 군량미를 징발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축한 식량을 허리띠를 풀어야 하며, 철제 농기구를 녹여 무기를 만드는 일도 벌어진다. 또한, 국토가 황폐화되면 사람과 기구가 있더라도 농사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농업에 기반한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손자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불태(不戰)’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의 논리는 전쟁에 대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국가 근간인 농업 생산과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리하라는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위기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만약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도 손자의 일관된 메시지다. 이런 손자의 전쟁관은 유목 민족이나 해양 문화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목·목축이나 해양 중심 문화에서는 이동과 약탈이 생활 방식의 한 부분이었고, 힘의 우위가 있을 때 타국을 침략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빈번했다. 따라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손자의 주장은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농경과 유목·해양이라는 생업 구조의 차이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각 사회의 근본적 태도를 갈라놓는 셈이다. 이에 농경 문화가 근간을 이루는 중국에 있어 손자병법은 가장 적합한 전략서였다.

국가 지도층의 입장에서, 전쟁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전쟁의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력과 정보력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했다. 경제력은 평시의 안정성과 전쟁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며, 정보력은 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조처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했다. 손자가 강조한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찾을 수 있다. 나와 상대방의 상황, 환경, 목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 흐름을 파악하고, 자국과 주변국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을 정확히 파악할 때, 불리한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줄고, 동시에 상대의 취약점을 활용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경제·외교 등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해 흔들 수 있다.

전국시대의 오자서는 손자의 전략으로 강대국 초나라를 격파했다. 진시황은 외교전과 심리전, 정보전을 통해 주변국을 약화시키고 통일에 성공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삼국지에서도 적을 속여 화공전으로 함대를 궤멸시켰던 적벽대전의 일화가 나온다. 이렇듯 손자병법의 요소는 중국의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대의 전장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법률·금융·언론·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전통적 군사력만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으며,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전쟁의 대상이 된다. 즉,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국가는 군사력 외에도 비대칭적 수단을 활용해 국력을 투사한다. 경제 제재, 국제법 활용, 무역 압박, 정보전, 사이버 공격, 심리전 등은 모두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 통합된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다. 90년대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을 분석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중국과 같이 당시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있던 후발국가가, 어떻게 하면 기술적, 전략적으로 우수한 상대와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국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이라는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4. 초한전과 인지전

초한전은 1999년 공군 대령 차오량(喬良)과 왕상쭈이(王湘穗)가 제시한 이론으로, 군사와 비군사, 정규와 비정규, 살상과 비살상의 모든 수단을 넘나드는 무제한적 전쟁 방식을 뜻한다. 즉, ‘국가의 유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한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초한전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심리·법률 등 모든 영역을 통합한 전면적 전략 개념이다. 이후 2003년, 중국은 초한전 개념을 제도화하여 ‘삼전(三戰: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전략으로 발전시켰다. 삼전은 미국의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략으로, 현대 전장에서 군사력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비군사적 무기 체계’로 기능한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지전(認知戰, Cognitive Warfare)’이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체계(정보를 습득·해석·인식하는 정신 과정) 자체를 무대로 삼는다. 단순한 국지전이나 사이버 공작을 넘어서, 대중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려는 시도가 곧 전투가 되는 것이 인지전의 본질이다. 개인과 집단이 서로 연결되어 형성하는 믿음·가치·문화라는 정보 환경을 이용해, 아측의 의도한 방향으로 군사적 기동이 완수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인지전이다.

인지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는 네러티브(narrative)다. 과거에는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집단 동원을 이끌었다면, 현대에는 ‘이야기’와 ‘단어’, 즉 설득력 있는 서사가 경쟁력을 결정짓는다. 네러티브는 글, 사진, 영상, 드라마, 정치인의 제스처, 교육과 강의, SNS 게시물 등 인간의 손과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거의 모든 산물을 통해 퍼져 나간다. 국가와 집단은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해석과 가치체계를 주입하고, 타국 또는 내부의 반대 서사에 맞서는 담론을 구축한다.

하이브리드전 맥락에서 네러티브는 지지층 결집, 방향 제시, 내부 응집 유지, 이탈자 제어, 전략 확산 등 정치적 기능을 다수 수행한다. 특정한 역사적 경험, 혹은 현재 상황을 재구성해 각 개인들의 피해의식·굴욕감·저항심리 등 심리적인 기저를 고취시키면, 개인들은 이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고, 곧 정치·사회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각성한 구성원들은 동일한 서사에 공감하는 다른 집단과 결속하여 대규모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네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확립하려면 명확한 서사 구조, 반복되는 핵심어(keyword), 그리고 확실한 ‘빌런(villain)’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통해 국민의 민족주의적 결속과 정권 지지를 강화하고, 내부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는 방화벽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책 실패가 있을 때도 ‘애국주의’나 외부의 위협 담론으로 내부 불만을 봉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타국이나 타 집단의 네러티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면, 대중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합법화·정당화할 수 있다.

어떤 메시지를 폭넓게 노출해 상대의 정체성이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인지전은, 법률전·경제전·사이버공작 등 다른 수단과 결합하면, 인지적 압박을 넘어 실제 정치·군사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말했듯, “현대의 권력은 무력보다 메시지와 이미지, 즉 네러티브의 힘이 좌우한다.” 결국 현대의 전쟁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으로 진화한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년의 수모”와 “중국몽(中國夢)” 같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내세워 국민의 정체성과 외부의 정당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리관유가 말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차용하여, 집단주의·권위주의·질서 중심의 체계를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의 고유한 질서’로 정당화한다. 손자의 방법이 군사적 근간을 제공한다면, 초한전과 삼전은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한 정치·심리·정보 전략의 기술적 구현체이다.

결국 중국의 초한전은 “미국과의 전통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전통 밖의 전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적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중국은 무력보다 정보, 여론, 인식을 무기로 삼아,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손자의 이상을 21세기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대의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존망은 이제 국민의 인식, 사회의 회복력, 정보의 흐름 속에서 결정된다.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손자의 유산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각 지역의 문화·정치적 특성에 맞게 현지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전략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초한전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한전 사례 - 동남아시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존재가 신냉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국가들을 ‘미국의 대리전 수단으로 전략한 아시아의 배신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지역 통치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구축했다. 다만 중국은 각 동남아 국가에 동일한 서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현지 문화적 특성과 정치 환경에 맞춘 내러티브를 사용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사례 - 화교 인구를 활용한 우호적 환경 조성

중국은 말레이계와 말레이 내 화교 사이의 인종적 긴장이라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화교는 1969년 인종 폭동 이후 말레이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종 관계는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근본적인 불신 배경이자, 중국이 정치·경제 엘리트층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게 만드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도 필리핀과 달리 중국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 내 여론 형성에 있어 문화적으로 교묘히 다듬은 서사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우호(friendship)’ 담론을 통해 중국을 협력과 번영의 파트너로 묘사하고, 해양에서의 충돌 등 안보 상에 발생한 마찰을 ‘일시적인 오해’ 수준으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갈등을 무마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실용주의’와 ‘비동맹’ 외교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화교 세력이 중국 본토에 동조 심리를 가지거나 반발할 여지 역시 존재하기에,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대응에 대한 제약이 걸려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적 반발 수위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정치적으로는 친중 성향의 국내 정치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중국은 총선에서 화교 기반 정당(MCA)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중 재벌이 소유한 중국어권 언론을 통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2017년 5월에 부채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대일로 사업 역시 MCA가 승리할 경우 긍정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경제적 압박을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역효과를 낳아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내각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의 ECRL 사업이 완료되면,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중동 원유를 수송할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공개적·비공개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며, 말레이시아 내부의 민감한 인종·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사회는 분쟁을 유발할 발언을 자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인도네시아 - 종교적 특성을 활용한 우호적 인식 조성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교의 인구 점유율은 국내의 약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90년대의 화교 인구는 인도네시아의 5%에 불과했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300대 기업 중 68%를 화교가 소유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98년 5월 인도네시아 인종 폭동에서 화교들에 대한 공격이 대대적으로 발생한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화교들은 차별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다. 이렇듯,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화교 인구는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에, 자산으로 활용했을 때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민어(호키엔, 차오저우), 하카, 광둥어 등 다양한 중국어 방언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언어적 환경은, 보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정치적 채널이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약 2억 7,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대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포진해있다. 정치적 영향력의 채널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종교 단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외교'를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슬람 관점을 통해 미국을 반(反)무슬림 국가로 규정하며, 미국이 수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의 비합리성,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이슬람 외교는 다각적이며 다양한 영향력 채널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정화의 원정'을 인도네시아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네러티브 전략이 돋보인다. 명나라 시기 환관 정화가 지휘했던 중국의 원정대는 인도네시아를 거쳐갔으며, 인도네시아에 정화의 사당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15세기 이래부터 중국이 무슬림과 가까운 관계였으며, 정화 원정을 언급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교육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재고시키고 있다. 이슬람에서 무함마드의 언행을 담은 전승록인 '하디스(hadith)'에는 '중국에서도 지식을 추구하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다(Seek knowledge even in China, for seeking knowledge is an obligation upon every Muslim).' 물론 이에 대해서도 전승 과정에서의 오류,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나, 이 문장 자체는 이슬람 사회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기재로 작용하였다. 이슬람 전승록에서의 어구, 그리고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트리(santri)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에게 중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시도로 중국 정부의 장학금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 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지자체와 파트너십 체결도 이뤄졌다. 실제로 2022년, 발리에서 칭화대 동남아시아 센터 캠퍼스 출범식에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도 하며, 중국에서 유학한 일부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현상도 파악된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을 공략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지전이 이뤄지고 있다.

필리핀 사례 - SNS를 통한 반미 여론 조성

필리핀의 경우, 화교 인구는 말레이시아만큼 적지만, 기본 언어적 기반은 영어라는 점이 꼽힌다. 필리핀에서 중국의 최우선 전략적 목표는 “미-필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주 마닐라 중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식·비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내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지역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서사는 EDCA(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및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계정들은 이미 #USTroopsOutNow, #NoToEDCA, #JunkEDCA 등의 해시태그를 활용해 실시간 여론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연결된 현지 계정들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심지어 Manila Bulletin, Manila Times, 카가얀 주지사 마누엘 맘바, 그리고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공식 계정까지 동원되며, 중국은 광범위한 현지 여론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 일부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군을 ‘침략자’나 ‘제국주의자’로 인식하는 정서를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 내 미군을 ‘범죄, 살인’ 등의 이미지로 프레임하며, 반미 정서를 강화했다. 이러한 담론은 일부 서방권 매체들까지 영향을 미쳐, 당시 “미국의 훈련과 위게임이 필리핀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은 현지의 외교·안보 기조와 두테르테 행정부의 친중 노선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냈다.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 군은 아직 현대화되지 않았고, 어떤 군사적 대립도 필리핀에 치명적”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패배주의적 네러티브를 퍼뜨렸다. 이러한 메시지는 결과

적으로 중국의 인지전 전략과 결합되어, 필리핀 내에서 “저항보다 순응이 낫다”는 여론을 강화시켰다. 이 패배주의적 담론은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반식민주의” 담론과도 연결되며, 필리핀 내 친중 스피커들은 “중국은 서구 제국과 달리 식민지를 만든 적이 없는, 자애로운 강대국”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이러한 서사에는 중국이 의도한 두 가지 주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중국은 자애로운 강대국이지만,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응징할 것이다.' 둘째로, '필리핀이 중국의 자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중국은 서필리핀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당시 두테르테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잔혹해짐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이 틈을 중국이 대신 채우며 필리핀 내 영향력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중국의 인지전 서사에 점점 더 취약해졌고,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의 국제적 입지 또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사례 - 경제적 압박을 통한 전략 거점 확보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도 중국의 초한전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 비재래식 수단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전략은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빚의 덫 외교 (Debt-Trap Diplomacy)'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사례는 초한전이 경제적 수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항구 건설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다. 스리랑카가 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7년 중국은 부채를 탕감하는 대신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과 주변 토지를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이 핵심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의 통제권을 확보하여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경제적 압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자산을 양도받은 사례이다.

미얀마의 미트소네 댐 건설 사업, 차우크푸 항구와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자원 확보와 인도양 진출 및 통제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중국은 미얀마의 이라와디 강 상류에 대규모 수력 발전 댐 건설을 추진하며 생산 전력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현지에서 대규모 주민 이주와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반발을 샀고, 결국 2011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차우크푸 항구 인프라 구축 역시 중국에서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계획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으나, 미얀마 정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가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프로젝트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얀마 내 군부와 친중 무장 단체 양측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얀마라는 국가 자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하이브리드전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전략인 ‘초한전’과 연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실제 적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손자 병법의 ‘부전이승(不戰而勝)’ 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한 초한전은 군사적 수단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 등 모든 영역과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한계와 경계를 초월해 공격하는 전략이다.

동남아시아 사례를 통해 우리는 초한전이 특정 국가의 내부적 취약점을 활용하는 정교하고 비대칭적인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화교 인구 활용,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특성 이용, 필리핀의 SNS를 통한 반미 여론 조작, 스리랑카/미얀마의 경제적 압박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등의 사례는, 상대국의 힘을 소모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초한전의 핵심적인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은 이러한 경계 없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은 평시와 전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직된 체계이다. 이는 비군사적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초한전식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위협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허위 정보와 심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안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